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”



보도자료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”

▶ 보도 일시 : 3.6(화) 석간
<인터넷> 3.6(화) 11:00 이후
▶ 총 14 쪽

◆ 노동시장정책과장 이 정 한
서기관 홍 경 의

☎ 02-2110-7162 Fax: 02)502-6855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등 고용영향평가 추진 제3차 근로복지증진계획 확정

- 고용노동부, 6일(화) 제3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-

- 고용노동부는 6일(화) 제3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「2012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」, 「제3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」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* 고용정책심의회 : 관계부처, 노사대표, 고용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고용정책 주요 사안을 심의·의결(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)

- 고용영향평가는 금년으로 시행 3년차를 맞았으며 국가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.

- 2011년에는 총 19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,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등 평가가 완료된 7개 정책*의 결과를 발표하였다.<붙임1>

* 2011년 상반기 평가과제 :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, 전통발효식품산업 지원, 농식품수출확대 지원, 생태하천복원 사업,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,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, 기술닥터 사업

- 평가결과,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지원으로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보였지만 일부 사업은 고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.

<2011년 고용영향평가 주요 내용>

- ▶ 세부사업별로 고용성과에 차이가 있어 고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간 예산비중 조정 필요
 -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: 신성장기반자금은 신규설비투자,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창업초기(1~3년)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효과적
 - 농식품수출확대 지원 : 고용효과가 큰 해외시장개척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물류비 지원 등 운영비 지원성격의 사업의 비중은 점차 줄여나갈 필요
- ▶ 사업 추진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필요
 -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: 대학과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산학협력이 미흡한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관광산업 등의 수요를 발굴, 여러대학에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1개 대학이라도 특화하여 선택과 집중모델을 통해 효율성 제고

- 이와 함께 금년도 과제로 경부/호남고속철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, 외식산업 육성 등 주요 산업정책, 유연근무제 확산 등 신규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사업과 제도에 대해 고용영향평가 필요성을 논의하였다.<붙임2>

* 선정여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- 평가과제는 그동안 부처협의만을 통해 선정하였으나 고용영향평가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평가결과가 축적되면서, 금년에는 일반국민, 민간 전문가 등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 과제 후보군을 구성하였다.

<2012년 고용영향평가 과제(안)>

- ▶ 주요 산업정책 : 외식산업 육성, 공예문화산업,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향상 정책, 원자력기술개발 및 실용화·상용화(R&D)
- ▶ SOC 및 건설분야 대규모 사업 : 제2컨벤션센터 건립(광주), 로봇랜드 조성사업(경남),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, 경부/호남고속철 사업
- ▶ 주요 제도 :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, 유연근무제 확산

□ 이채필 고용부장관은

- 고용영향평가가 금년으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하여 그간 평가 센터를 지정(한국고용정보원)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
-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제도 정착·발전기에 들어섰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.
- 앞으로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고, 평가 결과를 정부 재정투입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.

□ 한편,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·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“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(2012~2016)”을 수립·시행하기로 하였다.

- 이번 기본계획은 ▲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공공 복지를 대폭 확충하고, ▲근로자간의 복지격차를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,
- ▲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규모 및 범위 확대, ▲지방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출퇴근 통근버스 구입·임차 지원 확대, 공용기숙사 신축 또는 주택임차 지원, 작업 환경 개선 대책, ▲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. <별도 보도자료 배포>

□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를 마치면서

- 최근 경제가 성장해도 실질가계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·고용상황이 어렵다고 언급하면서

- 이러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 개인의 삶의 질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복지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.
- 이를 위해 오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논의한 고용영향평가와 근로복지증진계획을 통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확고히 하고 근로자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<붙임1> 2011년 상반기 고용영향평가 결과

<붙임2> 2012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(안)

□ 추진경과

- '11.4.27: '11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
- '11.6월~'11.12월: 7개 상반기 평가과제에 대한 평가실시
- 상반기 고용영향평가 최종 연구진 회의('12.1월)
- 과제별 평가결과 정합성 등 검토('12.2월)
 - * 과제별로 해당 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방법, 정책제언 등의 타당성 검토

□ 평가결과 총괄

- (평가정책) 직접적으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지원정책 뿐 아니라 고용효과에 대해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농식품 분야, 환경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도 분석
- (평가방법) I-O(투입산출)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,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(FGD)을 통해 실제적인 정책효과 파악
 - *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, 기술닥터사업의 경우 사업성격 상 타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I-O분석 제외

<기존 분석방법과의 차이>

- ◆ **I-O분석 도출과정 차별화:** 정부재정지출을 I-O모형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유형을 파악하여 새로운 분석모델 개발
 - * 농식품수출확대 지원정책의 경우 CGE모형을 통하여 정부정책에 따른 수출비용 감소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I-O 모형에 대입
 - * 융자사업의 경우 이자보전의 성격(운전자금)인지 시설투자(시설자금)의 성격인지 파악하여 분석방법 차별화
- ◆ **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강화:** 생동감 있는 정책제언 도출
 - *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정책의 경우 대학, 학생, 산학협력업체 등 정책대상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파악
 - * 전통발효식품산업 지원정책의 경우 현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의 실태조사 강화

- **(평가결과)**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지원으로 양의 고용효과를 보였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의 개선이 필요
- 각 정책이나 사업이 지역일자리와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
 - * 전통발효식품산업 지원: 천일염의 경우 생태체험, 천일염을 이용한 찜질방, 식당 등 관광산업과 연계
 - *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: 중소기업 취업률이나 지역기업 취업률이 높은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
- 사업관리과정에서 고용효과에 대한 구체적·실질적 관리가 부족
 - * 생태하천복원사업: 자치단체에서 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체계 마련 필요(4대보험 가입 등 관리)
 - * 경상남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: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(수혜자 관리, 고용효과 사후평가 등)
-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고용효과 제고를 위해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양성 방안 마련
 - * 농식품수출확대정책: 복잡한 원산지 규정 등으로 영세업체의 경우 수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출전문인력을 양성·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
- 세부사업별로 고용성파에 차이가 있어 고용성파를 높이기 위해 사업간 예산비중을 조정하거나,
 - *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: 신성장기반자금은 신규설비투자,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창업초기(1~3년)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
 - * 농식품수출확대지원정책: 고용효과가 큰 해외시장개척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물류비 지원 등 운영비 지원성격의 사업의 비중은 점차 줄어나갈 필요
-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일자리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할 필요
 - *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: 대학과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산학협력이 미흡한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관광산업 등의 수요를 발굴

<평가대상 사업별 고용효과>

사업명	예산	고용효과 (10억원당 효과)	주요 평가결과
산학협력중심 대학 육성	('09~'10년) 720억원	취업률 2.1%p 증가	• 선정된 대학의 취업률증가(2.1%p)가 탈락한 대학(1.9%p)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양적 고용연계성은 높지 않음 * 사업기간(3년차)이 취업률에 영향을 미칠 만큼 길지 않다는 시간적 한계성 존재
전통발효식품 산업 지원	('10년) 265억원	312명 (김치: 14.5명, 천일염 8.7명, 전통주 8.2명)	• 김치산업을 제외하고는 전 산업 평균(12.4명)보다 취업유발효과가 낮게 나타남 • 김치산업과 전통주는 보조금 사업이, 천일염은 용자사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
농식품수출확대 지원	('08~'10년) 1조7,020억원	27,256명 (16.12명)	• 해외시장개척 및 판매촉진사업의 10억원 당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 효과는 용자사업보다 크게 나타남
생태하천복원 사업	('08~'10년) 3,792억원	10,058명 (17.8명)	• 다른 산업에의 유발효과 중 지역 연계성이 높은 농림수산업 및 광산업에의 파급효과가 일반적인 토목사업보다 큼
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	('06~'10년) 11조,400억원	114,757명 (13.86명)	• 자금유형별로는 창업지원, 자금 용도별로는 시설자금, 대출경로별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, 기업별로는 사업기간이 짧고 고용자수가 적은 소규모 기업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
중소기업 육성자금 용자	('08~'10년) 1조5,000억원	7,246명 (15.55명)	• 시설설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모두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효과가 크게 나타남 • 경영안정자금은 주로 취업유지의 경향이 강하나, 시설설비 대출은 부분적으로 신규취업을 유발
기술닥터사업	('09~'11년) 65억원	212명	• 지원사업별로는 시험분석지원이 고용창출효과가 가능 큼 * 본 사업 참여를 계기로 다른 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비율이 높음(74%)

* 취업유발계수(10억원당 취업자수) 전산업 평균 12.4명

◆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, 경상남도 등 2개 자치단체의 10개 사업을 12년 과제로 추진 예정

구분	대상과제	주요 내용 및 평가 필요이유	소관 기관
산업 분야	외식산업 육성	· 외식 R&D 연구과제 발굴·지원,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, 외식업체 맞춤형 컨설팅, 정책자금 지원 등 · 최근 법률 제정 등 적극적 정책 추진 중이나 고용 파급효과에 대한 검증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효과 분석	농림수산 식품부
	공예문화산업	· 우수공예품 개발 및 유통·마케팅 해외시장 진출, 지역공예공방 육성 지원 등 공예진흥 기반 구축 및 공예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· 고용감소형 탈산업사회에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질에 부정적으로 작용. 일자리 창출 위한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문화서비스 산업에 대한 평가	문화체육 관광부
	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향상 정책	· 핵심부품·소재의 원천기술개발에 지난 10여년간('00~'10) 총 1조5천억원의 R&D자금투입, 특히 '10년 이후 '18년까지 10대 핵심소재 기술개발사업에 1조원 지원계획 · 국가고용전략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고용창출효과가 큰 부품소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실질적인 고용효과에 대한 검증	지식경제부
R & D	원자력기술 개발 및 실용화·상용화	·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기술개발을 통한 핵심원천 기술 자립으로 한국형 원전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추진 ('12년 총 1,705억원) · 원전 R&D 등 고부가가치 기술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고용 및 일자리와 연계 추진방안 분석	지식경제부

구분	대상과제	주요 내용 및 평가 필요이유	소관 기관
건설 및 SOC 분야	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	· 전국순환망의 경우 2,175km를 1조 2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'10년~'19년까지 구축, 내륙연계망은 자전거 이용수요에 따라 사업시기 조정 ·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며 녹색정상의 주요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방안 분석	행정안전부
	경부/호남고속철 사업	·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1992.6월부터 단계별로 시작하여 2단계사업 추진 중이며 2단계 사업은 '14년까지 20조 7,282억원 예산소요되며, 호남고속철 사업은 '17년까지 사업비 10조 4,901억원 소요 예정 · 장기간 걸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	국토해양부
	제2컨벤션센터 건립	· 국제행사 유치 등 MICE산업(기업회의, 포상관광, 컨벤션, 전시를 합한 산업) 활성화 기반 마련('11~'13 총 600억원) ·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구축사업의 고용효과 분석	광주시
	로봇랜드 조성사업	· 로봇시티 육성을 통해 로봇산업 경쟁력 확보('09~'14 총 7,000억원) · 세계 최초 로봇 테마파크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효과분석	경상남도
제도 분야	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	·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· 동 제도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크므로 고용에 연계되는 과정과 고용에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여 일자리 친화적 복지정책이 추진되기 위한 방안 및 대안분석	보건복지부
	유연근무제 확산	·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형태를 조절해 맞벌이 부부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시간제 근무 등이 포함 · 여성의 육아, 가사노동, 임금노동을 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 본 정책의 실질적 고용효과 분석	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고용노동부